

내년 예산안 0.7% 늘어난 1.1조 'R&D' 확대해 스마트농업 가속

농진청, 연구개발 분야 4.7% 증가
미래대응 성장동력 확충 등 투자
AI 기반 스마트 과원 구축 개발

농촌진흥청은 2일 내년도 예산안이 2024년에 비해 0.7% (73억 원) 늘어난 1조105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개발(R&D)분야가 6097억 원으로, 전년(5823억 원) 대비 4.7% (274억 원) 증가했다.

농진청은 ▲미래대응 성장동력 확충 ▲식량자급률 향상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 ▲농업·농촌 활력화 등 핵심 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2025년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확산, 디지털 육종모델 개발 및 푸드테크 산업화 지원에 1380억 원을 투자한다.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과원 구축 등 노지 스마트농업 활용모델 개발(38억 원)과 지능형 정밀농업 생산시스템 보급확대를 위한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 사업(24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 민간분야 종자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가기반의 육종플랫폼 구축(올해 63억 원→내년 70억 원)과 차세대 농작물 신육종기술 개발(53억 원→70억 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축산물·농식품 소재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위해 유용한 농업 미생물의 통합정보 서비스를 도입한다.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재배 안정성을 높인 가루쌀 신품종 육성과 수량성 향상 기술을 개발한다. 수입대체·수출용 한국형 장립종벼 품종 개발과 용도별 및



농촌진흥청 관계자 등이 지난 5월29일 경북 영천에서 열린 '마늘 수확 기계화모형 현장 전시회'에 참석해 개선된 기술을 살펴보고 있다. /농진청 홈페이지 갈무리

축형 밀·콩 품종 및 논콩의 침수피해 방지 기술 등 식량작물의 재배 안정성 강화를 위해 1067억 원을 투자한다. 국산 밀 생산 확대의 걸림돌인 이모작 재배 제약 요인 해결과 품질향상 등 소비 촉진을 위해 밀 자급률 도약 생산·소비 연계 핵심기술 개발(44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이상기상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축산물 피해 경감 기술을 개발한다. 재해와 병해충에 강한 품종 육성 및 농산물 생산·수확·출하 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한 수급안정 지원을 위해 1615억 원을 투자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 폐사 방지와 토종품종 개체수 확대를 위한 디지털 관리기술 및 토종별 품종 육성 등에 투자(17억 원→31억 원)를 늘릴 계획이다.

여성·고령농업인 등의 편안하고 안전한 농작업을 지원한다. 농업기초분야 기술인재 양성과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 등 활력이 넘

치는 농촌 구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 679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농촌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기계화율이 저조한 밭농업에 대하여 복합작업·다품목 범용화 등 편안한 농작업이 가능하도록 현장 맞춤형 밭농업 기계 고도화사업(17억 원→44억 원)을 확대한다. 또 농과계 대학과 협업을 통해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농업 R&D분야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농업 기초기반 전문기술 인재 양성(24억 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2025년도 예산안을 "디지털 육종 등 첨단과학을 융복합한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과 현장 확산으로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밭농업기계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급안정 지원, 병해충 방제 등 현장의 애로기술 해결로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농기자재 730만弗 규모 수출협약 성과

농어촌공사, 베트남 시장개척단 파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개척단을 베트남에 파견해, 한국산 농기자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 시장 개척에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 15개사로 구성된 개척단은 지난달 26~31일(현지시간) 호치민을 찾았다.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은 농기자재 8개 품목(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을 대상으로 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농산업 수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지에서 30개 유망 구매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수출상담회에서는

총 104건의 일대일 상담이 이뤄졌다. 총 73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 14건이 현장에서 체결됐다. 시장개척단은 또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와의 면담으로 현지 농업 정책과 인증 절차를 파악하고, 농기계·시설자재 시장 환경 세미나, 기업방문·상담, 유통시장 분석 등을 통해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기업은 상담회를 통해 수출에 필요한 절차와 현지 유통업체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계유지로 수출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파견에 앞서, 공사는 베트남 정부의 '농경지 70% 유기농 전환 계획' 등 정책 동향과 시장 특성을 사전에 분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이공계 핵심연구자 3301명에 825억 지원

교육부, R&D 예산안 5958억 편성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공분야 혁신 연구를 선도할 미래 핵심연구자 3301명을 선정하고 총 825억원을 지원한다. 내년 교육부 이공 분야 국가연구개발 예산(안)은 총 5958억원으로 올해 예산과 견줘 약 811억원 늘어난다.

◆ 석사과정생 1350명… 박사과정생 822명

이번 지원은 '이공 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박사 후 국내외 연수 ▲박사 후 성장형 공동 연구 등 세가지 사업으로 진행된다.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은 석·박사과정생이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석사과정생 1350명, 박사과정생 822명의 총 2172명이 선정됐다. 석사과정생은 1년간 1200만원, 박사과정생은 최대 2년 동안 총 5000만원을 학위 논문 관련 연구를 위한 연구비로 지원받는다.

'박사 후 국내외 연수 사업'은 박사 후 연구원에게 초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연구활동을 단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의 연수·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총 566명이 선정됐다. 이 중 국외 연수자 220명은 1년 동안 6000만원, 국내 연수자 346명은 최대 3년까지 총 1억8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박사 후 성장형 공동 연구'는 박사 후 연구원이 우수 전임 교원과 멘토-멘토를 이뤄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총 214팀 563명이 뽑혔다. 팀당 최대 연 3억원을 3년간 지원받으며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 내년 교육부 R&D 예산안, 전년 대비 15.8%p 증가

아울러 교육부는 '2025년 교육부 이공 분야 국가연구개발 예산(안)'은 총 5958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예산 5147억원에 비해 약 811억원 (15.8%)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는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대학 부설 연구소를 집중 지원하는 '국가연구소(NRL 2.0)', '글로벌랩' 사업을 신설하고, 대학 소속 연구자의 연구 몰입을 위한 '미래도전 연구지원', '글로벌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학문 후속세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비전임 교원을 위한 지원도 별도로 신설한다.

/이현진 기자 lhj@

한전, 고졸채용 확대·경력개발 지원 나선다

'고졸 체험형 인턴' 신규 도입
2027년까지 고졸 3~4배 확대
청년자립 선순환 모델 구축

한국전력이 올해 하반기 '고졸 체험형 인턴'을 신규 도입하는 등 고졸채용을 3~4배 확대한다. 한전은 2일 이같은 내용의 '고졸 인재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력중심 사회 문제 해결과 능력 중심의 청년 자립 선순환 모델 구축을 위한 고졸 채용 확대와 경력개발 지원이 골자다.

한전은 우선 2025년~2027년까지 향후 3년 간 고졸 제한채용 비중을 이전(2022~2024년) 대비 3~4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총 200개의 고졸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그간 한전은 고졸 입사자에게 대졸 입사자와 동일한 직급과 직무를 부여하고, 재학생 맞춤형 특화 채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내실있는 고졸 채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더해 올해는 하반기부터 고졸 인재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



전남 나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자리잡은 한국전력 사옥. 사진은 지난 23일 오후 항공 촬영. /뉴시스

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졸 체험형 인턴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우수 인턴에게는 공채 필기전형 가점을 부여한다.

한전은 특히 단순히 채용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입사 후 대학 수준의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을 통해 한전 맞춤형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 계약 학과'를 에너지 공기업 최초로 신설해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이다.

학사 취득 외에도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산업기사·전기기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의 직원연수원인 서울시 노원구 소재 한전 인재개발원에서 고졸사원 직무특화 과정 등 맞춤형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찾아가는 현장교육, 선배 직원과의 멘토링, 신입사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고졸사원의 안정적 조직 적응을 체계적으로 돕기로 했다.

김동철 사장은 "다가오는 에너지신 시대에는 단순히 대학 졸업장을 따는 것보다 그 분야에 대한 최신 정보와 검증된 실력을 갖추고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게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고졸 인재 종합지원 대책이 교육 시스템 혁신과 능력있는 청년의 경제적 조기자립으로도 이어져, 국가적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결혼율과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우수 기자 hys@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고용부, 내달 1일까지 집중신고 기간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집중신고기간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

정수급 당사자 외에도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김대환 기자 kdh@